

인구절벽의 역습, 이민-여성-맞춤일자리로 극복을

(어르신 맞춤형)

2019 위기를 경영하라

⑤ 초고령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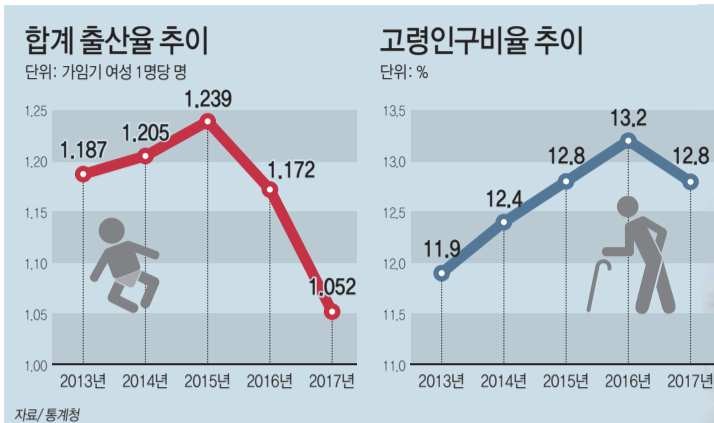
경제불황 가능성 ↑... 대비책 절실
노인맞춤형 일자리로 내수 활성화
개방적 이민정책으로 인력난 해소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 낮춰

“선진국이 인구절벽에 도달하면서 결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를 기록했다. 그 다음은 한국이다.”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이 몰아닥치고 있다.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세계적인 경제 예측 전문가 해리텐트는 제16회 세계지식포럼에서 “한국은 심각한 인구절벽에 직면, 경제불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경고했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며 인구팽창과 인구 폭발을 걱정하던 시대를 지나 ‘한 명만 낳아도 출산장려금을 주겠다’는 시대가 됐다. 저출산이 가속화되자 총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도 자연스레 예상보다 앞당겨지고 있다.

8일 통계청의 ‘2017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서방식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



중은 14.2%로 전년에 비해 34만명 늘었고, 생산연령인구는 11만6000명 감소했다. 2000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7% 이상)로 들어선 지 불과 17년만에 고령사회에 진입한 셈이다.

반면 경제활동인구 진입 연령대(만15세)는 급속히 줄고 있다. 만 15세 인구는 지난 2017년 처음 40만명대로 떨어진 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출생률 저하도 심각하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역대 최저인 33만명 안팎에 그쳤다. 베이비붐 세대가 대부분 은퇴하고,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원과 선생아가 감소하는 인구구조가 상당기간 고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구절벽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문제점
그렇다면 인구절벽은 우리나라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까. 올해 만 60세 정년을 앞

둔 1959년생은 84만9000명으로, 앞으로 16년간 거의 매년 80~90만명이 은퇴연령에 진입한다. 은퇴를 하게 되면 현역시절에 비해 소비를 줄이기 마련이다. 소비가 줄면 내수경기가 어려워져 경기활력이 떨어진다. 내수불황에 빠지는 것이다.

자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해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를 받아줄 후배세대가 취약하다.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은 적어지면서 자산가격은 떨어진다. 결국 소비와 자산시장이 장기침체에 빠져들어 고용, 금융, 제정 등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외사례로 본 인구절벽에 대응하는 법
해결책은 있다. 주요 선진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출생

(1946년이후)해 현재 50~70세의 연령수준이다. 선진국 대부분이 우리나라보다 10~30년 앞서 인구절벽의 문제를 고민해 온 셈이다.

고령화 대책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고령화 맞춤형 일자리, 이민 정책구축, 여성의 노동시장진입 등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우선 이들 국가는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했다. 노인빈곤층이 증가할수록 소비가 줄어, 내수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영국은 2000년 ‘뉴딜플러스50’ 정책으로 고령층 구직자 지원을 확대했다. 6개월 동안 실직상태인 구직자에게 약 1500파운드의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하고, 이들을 고용한 자영업자에게는 1년간 고용관련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이다.

줄어드는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한 다문화정책 ‘이민시스템’도 마련했다. 고령자 비중이 높아질수록 강도 높은 체력이 요구되고 위험을 감수할 3D업종의 인력난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인 호주, 캐나다, 미국, 독일, 스페인은 고령화가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가까운 나라 일본도 지난 2016년부터 이민 정책변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는 지난해 249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17만 4000명 증가했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도 확대했다. 스웨덴은 소득 대체율이 80%에 이르는 육아휴직급여와 국공립어린이집 보급료를 지원해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였다.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던 일본과 이탈리아도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늘리고 있다.

신원정 사회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에서도 양성평등과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국가가 출산율이 높았다”면서 “물론 우리나라도 보육환경, 아동수당도 도입됐지만 인구절벽문제를 극복하려면 사회전체적인 방향에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양성평등 정착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규제 강화·손해율 상승... 보험업계 수익 악화 ‘빨간불’

2019 금융전망

③ 보험

신규 가입자 줄고 중도해약 늘어나
험난 지속... 위기 돌파 타개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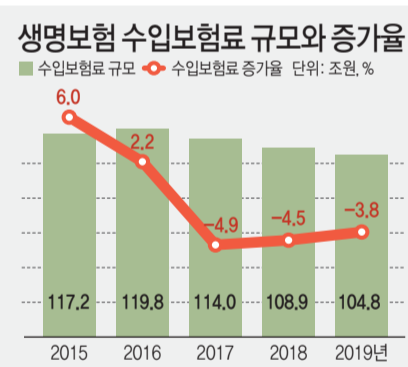
2018년 보험업계는 국내의 경기불황 속에서 쉽지 않은 해를 보냈다. 신규 보험가입자는 줄었고 중도해약자는 늘어나면서 실적 악화를 면치 못했다. 여기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해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저축보험판매를 줄이면서 초회보험료가 감소했다.

2019년 보험산업 전망도 밝지 않다. 경기 회복이 더디면서 신계약과 저축성보험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또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보험사를 향한 압박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보험사의 수입·원수보험료 증가율은 0.8%로, 지난해(1.18%)보다 증가 폭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저축성보험의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생명보험 일반저축성보험은 올해 17.4%, 손해보험 저축성보험은 28.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저축성보험 감소세 지속의 원인은 저금리로 인한 최저보증이율 하락, IFRS 17 등 회계제도와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 세제혜택 축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생보, 보장성보험·변액보험 성장해야
올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104조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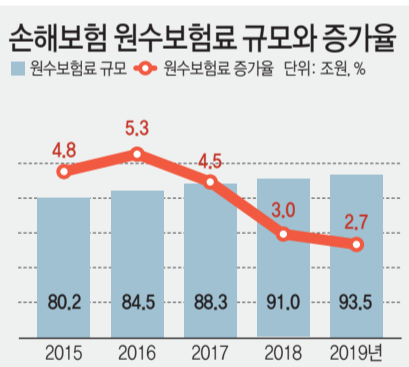


억원은)은 변액저축성보험(1.6%), 보장성보험(1.6%), 퇴직연금(3.1%)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3.8% 감소할 전망이다. 최근 가계부채 부담으로 해약환급금이 늘어난 데다 저축성보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보장성보험 증가세는 주춤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올해 생명보험의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43조3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IFRS17 도입과 건전성 규제 강화로 수익성이 높은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와 다양한 중저가 건강보험 개발을 증가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경기둔화로 인한 해약 증가와 보장성보험 수수료 인하 압력, 건강보험 분야의 경쟁심화 등은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생명보험의 저축성보험(생존·생사혼합·변액유니버설·변액연금)수입보험료는 10.6%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변액저축성보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반저축성보험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저축성보험은 회계제도 및 지급여력제도 변화, 수수료 인하 등의 요인



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17.8% 감소에 이어 올해에도 17.4% 감소할 전망이다.

생명보험의 변액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6% 늘어난 18조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변액저축성보험은 IFRS17 도입으로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서고 있으나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변액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불안전판매 우려 등은 증가세를 제한할 수 있다.

◆손보, 자동차보험·손해보험에서 증가세
손해보험 업계도 생명보험 처럼 마이너스 성장세는 아니지만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이다.

손해보험의 증가로 올해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93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016년 전년 대비 5.3% 성장했으며, 2017년 4.5%, 2018년 3%로 성장세가 점점 하락하고 있다.

다만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 저축성보험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 상해·질병(6.0%), 운전자·재물·통합보험(2.6%) 등의 보장성 부문과 자동차보험(0.5%), 일반손해보험(8.4%) 등에서 증

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올해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지난해 증가율 2.2%보다 소폭 떨어진 1.9%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확대 정책에 따른 영향과 통합형 보험의 경쟁력 약화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질병과 상해보험의 원수보험료도 지난해 8.5%보다 낮은 6.0%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의 5년 갱신주기 도래, 유병력자 실손보험과 간편심사보험 판매 호조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저축성보험은 28.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금리 장기화와 세제혜택 축소 여파가 지속되면서 신규 수요가 위축되고, IFRS17 최저보증이율로 인한 금리 리스크와 자본 부담이 늘어난 탓이다.

자동차보험은 지난해(0.2%)와 비슷한 0.5%의 성장이 예상된다. 자동차보험은 지난해에 이어 성장세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손해보험은 8.4%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재난배상책임보험과 10월 사이버보험 등 의무보험 확대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간단보험 활성화 진전, 중금리대출보험과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증가 등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보험산업은 전반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실적 악화 또는 둔화가 우려되지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먹거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

〈장기금리 변동폭 구성〉 (단위:%p)

장기금리	단기금리	기대	기간	프리미엄
미국	-3.0	-1.9		-1.1
독일	-2.3	-2.2		-0.1
영국	-1.4	-3.7		2.3
일본	-0.6	-0.1		-0.6

장기금리	단기금리	기대	기간	프리미엄
미국	-1.0	1.3		-2.3
독일	-2.9	-0.7		-2.2
영국	-3.1	1.0		-4.0
일본	-1.4	-0.1		-1.2

/자료=한국은행

금융위기 후 국내 장기금리 미국보다 유럽과 동조화 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장기금리가 미국보다 유럽 선진국과 동조화 현상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18년 12월호 조사통계월보 논고’에 게재된 ‘국내외 장기금리의 동조화 원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장기금리는 선진국과의 동조화 현상이 심화됐고 특히, 미국보다 유럽 선진국과 상관관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선진국 장기금리 사이의 상관관계는 상승했지만 한국과 재정위기 국가 및 신흥국 간 상관관계는 하락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장기금리는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장기금리 동조화 원인으로 ▲주요국 양적완화 정책 ▲글로벌 저성장·저물가 ▲한국의 양호한 대외건전성 등을 꼽았다.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의 대규모 장기국채 매입 등으로 기간 프리미엄이 동시에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주요국 장기금리 동조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향후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설 경우 우리나라 장기금리가 선진국 장기금리와 동반 상승할 수 있다”며 “선진국 장기금리 흐름에 주목하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